

자립적 경제발전전략과 북한적 정치체제의 형성과정

이성봉(고려대학교 강사, 정치학)

I. 머리말

그 동안 북한체제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정치적 요소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는 냉전체제와 남북분단이라고 하는 북한연구의 상황적 요인에 기인한 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방식에 있어서 북한이 보여준 '정치중심주의'에서 연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일제 식민지배에서 갓 해방된 조선에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한 원동력은 경제적 조건이 아니라 정치적 힘에 있다고 믿었다. 즉 북한의 생산력은 전근대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정치적 힘을 바탕으로 생산관계와 인민들의 의식을 개조함으로써 자본주의 단계를 뛰어넘어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체제에서 정치는 단순히 하부구조에 조응하는 피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경제를 운영하는

‘경제조직자’로서의 위치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¹⁾

그러나 북한체제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정치중심주의’가 곧 북한 정치체제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경제적 요소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경제조직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한 정치는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바로 그러한 위치로 인하여 경제적 요소로부터 영향을 받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경제적 성과가 정치적 행위에 달려 있는 메커니즘 속에서 정치는 경제적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구조로 재편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치는 ‘경제조직자’로서의 역할로 인하여 경제적 산출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경제적 활동이 정치에 의하여 지배되는 조건에서 경제적 산출은 곧 정치체제의 산출로 인식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정치체제의 정당성으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정치는 경제를 운용하는 행위자임과 동시에 경제적 요소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연구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북한적 정치체제의 형성과정을 경제발전전략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북한 정치체제의 특징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특히 정치체제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비교할 때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어,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는 북한에서는 유기체적인 유대, 비유와 모델로서의 가족, 과거·현재·미래를 연결짓는 커다란 사슬, 지도자의 아버지

1) 김기남, “우리 당 경제 정책의 과학적 기초”, 『근로자』, 제4호(1957), 29쪽.

와 같은 역할, 가족·공동체·국가 속으로의 개인의 흡수, 정치에서의 자유주의에 대한 적대와 문화에 있어서의 현대성, 위계질서의 원리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을 '조합주의 국가'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²⁾ 또한 와다 하루끼(和田春樹)도 북한을 김일성의 항일 유격대 경험을 모델로 하고 가족국가관과 사회 정치적 생명체론을 이념적 기반으로 하여, 모든 국민들이 수령의 명령에 절대 충성하고 일심 단결하는 '유격대 국가'로 명명하고 있다.³⁾ 이종석의 '유일지도체계'⁴⁾, 스즈끼 마사유키(鐸木昌之)의 '수령제'⁵⁾, 그리고 거번 맥코맥(G. MacCormack)의 '신전체주의'⁶⁾라는 개념도 결국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북한적 정치체제의 특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정치체제가 단순히 사회주의 정치체제라는 개념만으로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북한 정치체제의 특징적인 성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북한은 주체사상이라는 독자적인 정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데올로기의 성격이 유기체적 국가관을 핵심적 내용으로

2) 브루스 커밍스, "북한의 조합주의", 김동춘 엮음, 『한국현대사연구 I』 (서울: 이성과 현실사, 1988), 343쪽.

3) 和田春樹, 『北朝鮮: 遊撃隊國家の現在』 (東京: 岩波書店, 1998).

4) 이종석은 '유일지도체계'를 '단일지도체계'와 구분하면서, '단일지도체계는 주로 힘의 통치(지배)에 의존해서 존립하는 데 비해, 유일지도체계는 힘뿐만 아니라 이 체계를 합리화시키는 이데올로기와 사회 문화적 정서까지도 스스로 재생산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종석, 『조선로동당 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1995).

5) 스즈끼 마사유키는 수령을 '인민대중의 혁명을 지도하는 모든 권력과 권위와 이데올로기를 독점하고, 혁명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것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유일 최고의 지도자'로 정의하고, 수령제는 이러한 '수령의 영도를 대를 이어 계속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체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鐸木昌之, 『北朝鮮: 社會主義と傳統の共鳴』 (東京: 東京大出版社, 1992).

6) G. MacCormack, "Understanding the North Korea", *New Left Review*, no.198(1993).

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는 각국의 구체적인 현실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일정한 변천을 겪어온 것이 국제 사회주의 운동의 일반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북한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구체적인 실천 이론으로서 북한식 정치 이데올로기가 등장하는 것은 필연적이고도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주체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북한의 현실에 적용한 실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그 자체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대치한 새로운 순수 이데올로기로 자처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이데올로기와 질적인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⁷⁾

나아가 오늘날 북한의 정치질서는 사회유기체론적인 원리에 의해서 정당화되고 있다. 북한의 정치이론에서 핵심이 되고 있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육체적 생명과 정치적 생명이 있으며, 육체적 생명은 친부모가 주지만 정치적 생명은 ‘아버이 수령’과 ‘어머니 당’에 의해서 부여된다고 한다. 이렇게 정치적 생명을 매개로 아버지 수령, 어머니 당, 그리고 대중이 혈연적 관계에 기초해서 혁명의 주체로서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혁명적 대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회체제, 이것이 바로 사회정치적 생명체라는 것이다.⁸⁾ 오늘날 북한의 정치적 질서는 바로 이러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의하여 정당화되고 있다.

둘째, 최고지도자에 대한 신격화가 국가의 이념으로서 공식화되어 있으며, 최고지도자의 절대적인 지배권이 제도적으로도 확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명제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명제는 “인민대중은 역사의

7)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정일저작선』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1), 309~328쪽.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44~51쪽; 최완규, 『북한은 어디로』 (서울: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6), 175~182쪽 참고.

8)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321쪽.

창조자이지만 옳은 지도에 의하여서만 사회역사 발전에서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명제와 만나게 됨으로써 결국 “수령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논리로 이어지게 된다.⁹⁾ 이러한 논리에 따라 북한에서 최고지도자인 수령의 위상은 절대적인 것으로 설정되며, 수령의 영도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복종만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최고지도자의 이러한 위상은 제도적인 차원에서도 보장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체제는 3권분립 대신에 집단지도체제와 민주집중제에 의하여 최고지도자의 권력 독점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 일반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원칙을 부정하고, 최고지도자의 ‘유일적 지도’를 정치의 기본틀로 확립하고 있다. 특히 1972년에 채택된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을 통하여 주석제가 신설됨으로써 북한의 최고지도자는 당과 국가기관에 대하여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근거가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이다.¹⁰⁾

셋째, 당조직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 비하여 크게 발달되어 있으며, 당의 활동영역 역시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전면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현재 북한의 조선노동당은 30만 개의 당세포와 전체 인구의 17%에 달하는 300만 명의 당원을 보유한 거대 정당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¹¹⁾ 이는 구 소련이나 중국의 공산당이 전체 인구의 5% 내외의 당원비율을 보유한 것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높은 수치인 것이다.¹²⁾

9) 위의 글, 320쪽.

10) 북한은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에서 채택된 ‘김일성 헌법’에서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모신다’는 명분으로 주석제를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실제적인 최고 통치자인 김정일이 당 총비서직뿐만 아니라, 개정된 헌법에서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인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음으로써 ‘유일적 지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1) 서진영 편, 『현대중국과 북한 40년: 자료와 통계』 (서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89), 266쪽.

또한 북한의 조선노동당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공산당에 비해 매우 광범위한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주의 정치체제는 일반적으로 당-국가 체제(*party-state system*)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사회주의 국가의 당은 실질적인 유일당일 뿐 아니라, 당권이 모든 정치기구의 역할과 권한에 우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과 국가 사이에는 나름대로의 역할 분담, 즉 당은 주로 정치적 지도를, 국가기관은 행정활동을 담당하는 것을 일반적인 원칙으로 삼아왔다.¹³⁾ 북한 역시 1950년대까지는 당의 '행정대행' 현상을 당 활동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경제관리를 비롯한 제반 국가운동을 당조직이 전면에 나서서 직접 담당하는 체제를 확립하였으며, 그 결과 오늘날 북한의 조선노동당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 역할이 매우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¹⁴⁾

넷째, 대중에 대한 조직화 수준이 높으며, 대중은 체제와 체제적 목표에 대하여 순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조선노동당 이외에도 사회계층별로 조직된 조선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동맹, 조선문학예술총동맹, 기자동맹 등과 성별·연령별로 조직된 조선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 소년단 등 100여 개의 대중단체를 조직화하고 있다.¹⁵⁾ 이러한 대중단체는 '광범위한 대중의 사상교양조직',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인전대', 그리고 '당의 충실한 보조자'로 규정되고 있으며,¹⁶⁾ 대중들은 이러한 단체생활을 통해 체제가 요구하는 신민형으로 주도되고 있으며,¹⁷⁾

12) Richard F. Starr (ed.), *Yearbook on International Communist Affairs, 1988* (Stanford, CA: Hoover Institute Press, 1988), pp.xv-xxiii.

13) Robert K. Furtak, *The Political Systems of the Socialist States* (Brighton: Harvester Press, 1986), p.11. 이의 예외적인 경우로 1972년 이후의 알바니아를 들 수 있다.

14) 전인영, "조선노동당: 북한사회의 지도세력", 전인영 편, 『북한의 정치』 (서울: 을유문화사, 1990), 244~245쪽.

15) 『내외통신』, 제1104호, 1998년 4월 9일.

16) 1980년 개정 "조선로동당규약" 제9장 제56조.

17)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사회구조와 사회의식의 이중』

그 결과 북한의 대중은 다른 어떠한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체제와 체제적 목표에 순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III. 자립적 경제발전전략의 의미

일반적 의미에 있어서 자립경제정책은 '대내적으로는 투자 재원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수지 균형을 이룩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국민경제를 추구하는 정책'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자립경제정책은 어느 특정한 국가에 국한되 기보다는 현대 국가가 일반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보편적인 경제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해방 이후 1950년대까지는 북한 역시 기본적으로 이러한 의미의 자립경제를 추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북한정권이 정식으로 수립되기 이전부터 '자립경제' 혹은 '자립적 민족경제'라는 용어는 북한의 주요한 경제정책적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예를 들어 1946년 12월 김일성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각 도 인민위원회 산업부장 및 국영 기업소 지배인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밝힌 바 있다.

“조국의 자주독립과 부강 발전을 보장하는 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업은 인민경제를 빨리 부흥 발전시키며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를 닦는 것입니다. 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닦지 않고서는 부강한 민주주의 독립국가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¹⁸⁾

성 연구』(서울: 남출판, 1995), 119~143쪽 참고

이러한 자립경제정책은 이후 북한정권이 수립될 당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 정강’ 중 하나로까지 채택되었으며,¹⁹⁾ 본격적으로 공업화를 추진하기 시작하는 제1차 5개년 계획에서도 핵심적인 과제로 등장하게 된다. 1958년 6월 최고인민회의 제2차 회의에서 국가계획위원장 이종옥은 제1차 5개년 계획에 대한 보고를 통해 “나라의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며 인민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우리 조국의 릉성 발전과 인민들의 보다 행복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 조건”²⁰⁾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자립경제는 해방 직후부터 북한의 기본적인 경제정책으로서 등장하고 있었으며, 이는 전후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으로부터 경제복구에 필요한 막대한 자본과 기술을 지원 받고 있을 당시에도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이 당시까지 북한지도부가 상정하고 있었던 자립경제는 일반적인 의미의 자립경제와 질적인 차별성을 갖는 것은 아니었다. 해방 이후 북한의 지도부는 경제적 낙후성과 일제의 식민지 지배로 인한 산업구조의 왜곡을 극복하는 것을 무엇보다 시급한 과업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과업의 달성을 곧 ‘자립경제’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사회주의권의 막대한 원조에 의존하여 전후복구 작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북한으로서는 외부의 도움이 없어도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자립경제’는 하나의 염원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자립경제정책은 1960년대에 들어와 질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1950년대까지 북한의 지도부는 사회주의 경제질서에 대한 낙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즉 자본주의 체제와는 달리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각국 사이에 경제적 종속이나 착취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18) 김일성, “국영기업을 계획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 1쪽.

19) 국토통일원,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제1집 (서울: 국토통일원, 1988), 95~96쪽.

20) 위의 책, 152쪽.

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권과의 대외경제관계의 확대는 낙후된 북한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와서 사회주의권 내부의 경제 질서를 바라보는 북한의 시각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1960년대 초에 발간된 북한의 경제이론서의 다음과 같은 구절은 이러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매개 나라에서 내부 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강력한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것은 국가적 자주성을 강화하고 경제발전 수준에서의 차이를 제거함으로써 실제적 평등에 기초하여 나라들 간의 경제적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한다. 레닌이 예언한 바와 같이 공산주의가 승리한 후에도 상당히 오래 동안 나라와 민족적 차이가 남아 있게 된다. 따라서 개별적인 나라들의 자주성이 전반적으로 강화됨이 없이는 호상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그들간의 관계를 강화할 수 없다.”²¹⁾

즉 자본주의적 종속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경제적 종속과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에서는 당연히 국제분업에 대해서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

“만일 어떤 ‘생산전통’이나 ‘자연 경제적 유리성’ 혹은 ‘수익성’을 논하면서 제한된 일부 생산 부문만을 발전시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나라의 민족경제를 기형적인 것으로 만들며 다른 나라 경제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움직여 나갈 수 없는 것으로 되게 할 것이다. 특히 과거에 공업이 발전하지 못하였던 나라들에서 ‘생산전통’이 있는 부문만 발전시키게 된다면 이 나라들은 현대적 공업을 가지지 못한 채 계속 낙후한 처지에 남아 있게 될 것이다.”²²⁾

21) 조선로동당출판사, 『우리 당의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로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30쪽.

사회주의 경제질서에 대한 북한의 이러한 인식은 자립경제를 달성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대외경제협력보다는 ‘자력갱생’의 원칙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전후 사회주의권의 원조와 분업체계에 의지하여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고자 했던 과거 북한의 경제정책과는 근본적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즉 자력갱생은 단순히 의타심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만이 아니라, 경제발전정책에 있어서 대외경제협력과 분업보다는 국내의 인적, 물적인 자원을 동원하여 경제발전을 이루겠다는 하나의 경제정책으로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전환은 자립경제에 대한 북한의 개념 정의에서 보다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북한의 자립경제정책은 단순히 자본과 기술적 대외의존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생산의 인적 및 물적 요소들을 자체로 보장할 뿐 아니라, 민족국가 내부에서 생산 소비적 연계가 완결되어 독자적으로 재생산을 실현하여 나가는 경제체계²³⁾로 변하게 된다. 즉 자원, 자본, 기술, 그리고 노동력 등 모든 생산요소의 동원에서부터 소비생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제활동이 국내에서 완결되는 자급자족적 경제체제를 지향하는 의미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²⁴⁾ 이러한 자립경제에서는 ‘원료, 기지, 경험 및 준비된 간부 등 건지로 보아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진 공업부문의 발전에 힘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다방면적’이고 ‘종합적’인 경제체제의 건설이 과제로 등장하게 된다.²⁵⁾

22) 『로동신문』, 1963년 6월 12일.

23) 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208쪽.

24) 북한은 자립경제를 ‘폐쇄경제’ 혹은 ‘자급자족경제’라는 비판에 대하여, 자신들의 경제정책은 ‘유무상통’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자급자족체제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에서 주장하는 유무상통의 원칙은 국제적 비교우위에 따른 교역이 아니라, 원유와 같이 불가피하게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만을 교역한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25) 김일성,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

그러나 이러한 자립적 경제발전전략은 아직 생산력 수준이 낮은 북한경제가 감당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자본과 기술이 열악한 상황에서, 또한 좁은 국토 안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생산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초반 북한은 자립경제를 향한 ‘대진군’에 나서게 된다.

IV. 자립적 경제발전전략의 추진과 북한적 정치체제의 기반 구축

1. 통원이데올로기로서의 주체사상의 등장

1955년 12월 김일성이 당 선전선동 일꾼들 앞에서 행한 연설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주체사상의 연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일성은 이 연설을 통해 당 사상사업이 교조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져 있다고 비판하고, 당 사상사업 부문에서의 주체의 확립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하였던 것이다.²⁶⁾ 김일성이 당시 ‘주체’를 거론한 것은 당내 역학관계에서 소련과의 연안파를 견제하기 위한 권력투쟁의 수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전후 김일성의 권력은 전전에 비하여 상당히 강화되었지만 아직 당내에는 잠재적 라이벌 세력인 소련파와 연안파가 상당수 남아 있었다. 김일성이 비록 소련에 의하여 북한의 지도자로 선출되고 초기에 큰 지원을 받았지만, 잠재적 라이벌 세력인 연안

자”,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538쪽.

26)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560~585쪽.

파와 소련파의 도전을 방어하고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주체’를 내세움으로써 자신의 체제에 정통성을 부여하고 소련이나 중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대세력을 제어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했던 것이다.²⁷⁾ 따라서 이 당시까지만 해도 ‘주체’의 문제가 마르크스-레닌주의와의 차별성을 부각하거나,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북한의 현실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방법론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자립적 경제발전전략이 본격화되면서 이러한 ‘주체’의 문제는 대외적으로는 자립적 경제발전전략을 합리화하고, 대내적으로는 인민들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노력 동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정치 이데올로기로 발전하게 된다.

북한의 자립적 경제발전전략은 내부의 인적, 물적인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인민들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유물론과 유물사관은 자본주의 필망론과 사회주의 혁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에는 매우 유용한 이데올로기이기는 하였지만, 이미 사회주의 건설 단계에 진입한 북한의 현실에서 인민들의 적극성을 이끌어 내는 이데올로기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자립적 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하면서 ‘자력갱생론’을 통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점차 주체사상으로 체계화되어 나가게 되는 것이다.

자립적 경제발전전략이 본격적으로 표방되던 1962년 말, 『로동신문』은 논설을 통해 “주체에 대한 사상은 우리 당이 자기행동에서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는 근본원칙”이라고 밝히고, “조선혁명 수행에서 주체를 확립한다는 것은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이라는 주권을 가지는 것이며,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을 우리나라의 구체적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며 모든 것을 조선혁명의 성과적 수행에 복무케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자력갱생의 원칙에 확고히 의거하여 민족경

27) 전인영, “주체사상의 형성배경과 이론체계”, 76쪽.

제의 자립적 토대를 축성함에 대한 노선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우리 당의 주체의 사상을 반영한 가장 현명한 방침"이라고 주장하였다.²⁸⁾ 북한의 문헌에서 처음으로 '주체'의 문제를 '사상'적 차원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보이는 이 논설은 그 내용에 있어서도 단순히 일반적인 의미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자립적 경제발전전략의 기본 이념으로서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체사상에 대한 개념규정은 1965년 4월 반동회의 10주년을 기념하여 인도네시아를 방문중이던 김일성이 알리 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한 연설을 통해 보다 구체화된다. 그는 "주체를 세운다는 것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주로 자체의 힘으로 풀어 나가는 원칙을 견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력갱생의 정신을 발양하며 자기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풀어 나아가는 자주적인 립장"이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김일성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주체를 세우는 것과 함께 군중노선을 관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결정적 담보는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남김 없이 동원하며 그들의 열성과 창발성과 재능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다"고 강조하였다.²⁹⁾ 이러한 김일성의 언급은 주체사상이 단순히 대외적 독자성에 대한 강조나 국내의 권력투쟁의 수단만이 아니라,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이를 끌어내기 위한 정치 이데올로기로서의 성격이 보다 전면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주체사상에 대한 김일성의 규정 이후에 『근로자』에 실린 한 논문에서는 '자주성·창조성과 자력갱생의 원칙'으로 정식화된다.

28) 『로동신문』, 1962년 12월 19일.

29) 김일성,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 혁명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19~225쪽.

“자주성·창조성 원칙, 자력갱생의 원칙은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당과 인민의 입장의 두 측면에 관한 문제로서 전일적인 주체사상을 이루고 있다. 이것들은 호상 보충하여 호상 전제로 되면서 불가분적으로 통일되어 있다. 자주적, 창조적 입장이 확고할 때라야 자력갱생의 원칙도 잘 관철할 수 있으며 자력갱생하여 자체의 밀천이 튼튼할 때라야 자주적 입장도 훌륭히 지킬 수 있다.”³⁰⁾

즉 그 동안 자립경제를 선언하면서 강조해 오던 자력갱생론이 주체사상의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오게 된다. 특히 이 논문은 혁명과정에서의 인민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주체를 확립할 때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혁명 수행에서 원칙적 의의를 가지는 일련의 근본적인 문제들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그것은 우선 혁명의 주인은 그 나라 당과 인민이라는 문제이다. 혁명이 해방되어야 할 인민대중 자신의 사업이라는 것은 노예폭동으로부터 오늘날의 혁명에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진리이다.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역할은 혁명의 승리적 수행을 위하여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특히 모든 활동이 인민의 의식적이고 자각적인 사업으로 되는 사회주의 혁명에서 그들이 혁명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된다.”³¹⁾

이처럼 자력갱생론을 핵심으로 하는 주체사상은 이후 일련의 체계화 과정을 거쳐 점차 독자적인 정치 이데올로기로서 주장되기 시작하였다.

30) 신진균, “주체사상은 공산주의적 자주, 자립의 사상이다”, 『근로자』, 제19호(1965), 15쪽.
31) 위의 글, 7~8쪽.

2. 경제조직자로서의 당의 강화

해방 직후부터 1950년대 말까지 북한의 경제관리체계는 스탈린 시기에 확립된 소련의 모델을 따라 국가의 행정 조직체계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었다. 즉 공업분야의 경우 중앙 수준에서는 내각의 경제관련 성·국이 산하의 공장·기업소를 직접 지도하고, 공장·기업소 내에서는 성·국이 임명하는 지배인이 경영활동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지배인 유일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농업분야 역시 농업성-도 인민위원회-군 인민위원회-협동조합으로 이어지는 행정체계가 경제관리의 중심 축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따라서 당의 역할은 거시적인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그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 지도'를 수행하기는 하지만, 경제관리의 직접적인 주체는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1950년대 말에 노력동원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김일성은 점차 경제관리에 대한 당의 지도적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1959년 8월 28일 당중앙위 상무위원회에서 김일성은 경제부문을 담당하는 행정관리기관에 있어서 사업의 수행은 해당 기관의 행정·기술적 지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반드시 '정치사업을 우선하며 당조직의 당적 지도 및 통제를 결합'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사업에 대한 당의 지도를 거부하는 태도'나 '기술 신비주의적 태도'가 강하게 비판되게 되었다. 이러한 결정 이후 간부의 정치의식을 높인다는 목적에서 매일 3~4시간의 정치학습이 의무화되었다.

이러한 당적 지도에 대한 강조는 1961년 제4차 당대회에서의 김일성의 발언에서 보다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주의 제도가 전면적으로 확립되었으며 우리 당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일체 부문과 인민생활의 전반적 분야에서 완전한 책

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분야에서 각급 당위원회들의 지도와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에서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 지도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됩니다. 당위원회들은 인민경제 계획수행에서 성, 관리국들과 경제기관들이 당정책을 정확히 집행하도록 통제하며, 특히 도, 시, 군 당위원회들은 공업과 농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³²⁾

이후 경제에 대한 당의 지도는 1961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2차 전원회의를 통하여 당이 직접 경제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체계로 개편됨으로써 제도적으로도 정착하게 된다. 이 회의에서 김일성은 도당위원회에서 관할 지역 내 공장, 기업소들을 직접 책임지고 지도하는 대신 행정기관인 성, 관리국에서는 공장·기업소들에 대한 자재보장, 기술지도, 노동행정 및 후방공급사업에 대한 지도를 하도록 지시하였다.³³⁾ 이러한 김일성의 구상은 1961년 12월 15일 당 정치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보다 구체화되었다. ‘대안의 사업체계’라고 이름 붙여진 이 새로운 관리체계 개편의 핵심적인 내용은 공장·기업소의 운영에 있어서 당이 생산활동의 전면에 나서게 하는 것이었다. 김일성은 그 동안의 공장관리체계에서 가장 큰 결함은 “생산에 대한 행정 기술적 지도체계만 있고 당적 정치적 지도체계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공장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 밑에 생산활동을 해 나갈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행정기관에서 임명하는 지배인이 거의 전권을 가지고 운영하던 공장관리가 공장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로 대체되었다. 즉 공장당위원회가 “공장 앞에 맡겨진 생산계획 수행과 공장의 전반적인 운영 사업에 대하여 책임지며 이것을 직접 지도”³⁴⁾하도록 한 것이다.

32)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4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 『조선로동당대회 자료집』 제2집 (서울: 국토통일원, 1988), 81~82쪽.

33) 김일성, “모든 힘을 여섯개 고지의 점령을 위하여”, 『사회주의 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2권, 40쪽.

34) 김일성, “새 환경에 맞게 공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할 데 대하여”, 『사회주의 경제

김일성이 이처럼 당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관리체제로 개편시킨 이유는 소련으로부터 모방한 경제관리체제는 노력 동원적인 방법에 적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배인 유일관리제에서는 생산활동의 직접적인 책임과 권한이 국가기관에서 임명하는 지배인 1인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노력 동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당을 경제관리의 전면에 내세워 ‘군중노선’을 통한 노력 동원을 일상화시키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산관리에 대한 당적 지도는 농업분야에서도 적용되었다. 1960년 2월 강서군 청산리를 현지지도하면서, 청산리 방법, 즉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고 대중의 자작적인 열성과 창발성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³⁵⁾ 군중노선을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당이 경제관리의 중심 축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후 김일성은 농업분야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해 강서군 청산리를 현지지도하고, 그 결과를 1962년 2월 23일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밝히게 된다. 이 회의를 통하여 농업분야에 대한 관리체제는 기존의 행정조직을 통한 지도에서 ‘경영위원회’를 통한 지도로 개편되고, 경영위원회가 당의 지도를 받게 되었다. 새로운 농업관리체제의 등장에 따라 군당위원회의 주요 임무가 농촌경영과 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지도와 통제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농업분야에 대한 당의 위상과 역할은 북한이 농촌관리의 기본단위를 군으로 설정함으로써 보다 강화된다. 1962년 8월 김일성은 산간지대의 모델로 설정된 평안북도 창성군 일대를 현지지도하고, 그 결과를 8월 7~8일 ‘지방당 및 경제일군 창성연석회의’를 통하여 밝혔다.³⁶⁾ 이 회의에서 김일성은 군을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거

관리문제에 대하여’, 제2권, 124쪽.

35)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건』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1123쪽.

36) 김일성, “군의 역할을 강화하며 지방공업과 농촌경영을 더욱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훨씬 높이자”, 『사회주의 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2권, 305~349쪽.

점'으로 설정하고 "군 사업을 강화하고 군 소재지를 잘 꾸리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고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군 사업의 핵심으로 바로 군당위원회를 들었다. 그는 군당위원회를 '농촌경리를 비롯하여 군의 모든 사업을 직접 책임지고 조직 지도하며 집행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따라서 군당위원회는 "군인민위원회와 군농업협동조합 경영위원회를 잘 지도하고 모든 부문을 잘 움직여 나가야 하며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 세우고 그들이 다 움직이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리하여 농업부문에 대한 당적 지도체계가 확립된 것이다.

3. 대중적 조직화와 집단화

해방 직후부터 북한은 노동력의 동원과 엄격한 규율을 경제관리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다루어 왔다. 자금과 기술이 부족한 북한으로서는 노동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는 곧 생산력과 직결되는 문제였던 것이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와 기존의 노동력 관리 방법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1950년대까지 북한의 노동력 관리는 잠재적 노동력의 발굴, 노력 동원운동, 그리고 노동규율의 강화 등 세 가지 방법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력 관리 방법을 계속 유지하기에는 그 한계점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었다. 잠재적 노동력을 발굴하는 방법은 이미 대부분의 여성 및 노·소년 노동력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비생산적 노동력도 더 이상 줄일 수 없을 만큼 생산적으로 전환된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천리마 운동과 같은 노력동원 운동의 효과 역시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으며, 운동이 끝나면 생산성이 오히려 이

전보다 저하되는 '생산의 파동성'을 발생시키고 있었다. 전후부터 계속된 노동 규율의 강화 역시 노동자들로 하여금 주어진 규율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데 그쳤을 뿐, 생산성 향상이나 생산품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농업분야도 예외가 아니었다. 농업협동화가 달성되면서 농민들은 생산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보다는 자신의 분배 몫이 결정되는 '노동일'을 늘리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결국 노동자들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 고안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작업반'이나 '분조'를 단위로 노동력을 조직화하여 통제하는 방법이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첫째는 작업반 단위의 생산실적을 개별 노동자의 임금에 반영시킴으로써, 작업반 내부의 상호경쟁과 감시를 일상화시키는 것이다. 공업분야에서 개인의 임금은 개별 노동자의 기술수준이나 노동시간, 그리고 노동강도 등에 의하여 일차적인 평가가 된다. 그러나 이와 함께 작업반을 단위로 하는 '내부 재산제'와 '작업반 상금제' 등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실적이 전체 작업반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였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개인의 노동에 대한 상호감시와 경쟁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해방 직후부터 일부 생산현장에서 실시되어 왔지만, 1961년 3월 전원회의를 계기로 모든 산업부문에 확대, 강화되었다.³⁷⁾

둘째는 작업반 조직을 통하여 엄격한 규율과 조직화가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북한은 1959년 11월 내각결정 제67호로 "로동행정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라는 결정을 채택함으로써 노동력에 대한 통제를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이 결정의 목적은 전 사회적으로 노동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동원하기 위하여 국가계획위원회, 각 성, 도 인민위원회가 담당 수행하여야 할 과업들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었다.³⁸⁾ 그러나 이러한 조치

37) 조선로동당출판사, 『경제지식』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161~162쪽.

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이기주의와 낭비현상이 근절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응하여 북한은 1961년 1월 7일 내각결정 제9호 “노동내부질서표준규정”을 제정하여 노동력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이 규정은 일반규정, 노동시간과 그의 이용, 노동자, 사무원의 채용과 전직 및 해직 절차, 책벌장을 설정하고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출퇴근, 점심 및 휴식시간, 출근정리, 지각, 조퇴, 외출 질서 등 근로자들의 노동생활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규제하였으며 그 위반에 대한 책벌형태도 여러 가지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작업반 단위의 규율과 조직화는 농업분야에서도 적용되어, 작업반은 계획작성, 작업수행, 작업평가, 보수분배에 있어서 기본단위가 되도록 하였으며, 일단 소속 작업반이 결정되면 구성원은 고착되도록 하였다. 북한의 농민들은 개개인마다 경작지, 경작방법, 작물종류, 작업일자, 사용기구가 정해져 있으며,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작업을 소홀히 하면 작업반 내에서 또 조합에서 즉각적으로 제지를 당하거나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작업반을 통한 규율의 강화 역시 1960년대 중반 ‘분조도급제’가 정착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셋째는 작업반을 하나의 사상교육의 학습장으로 이용하였다는 점이다. 작업반은 생산단위이면서 동시에 북한지도부의 정책적 의지를 대중적 차원에서 관철하기 위한 ‘정치적 단위’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북한의 공식 규정에 의하면 작업반이란 “일정한 생산과제에 따라 공동작업이 수행되고 직접 기술혁신이 실현되는 생산의 말단 단위일 뿐 아니라 기업관리에 대중이 직접 참가하는 기본단위이며 대중적 사상교양사업의 거점”³⁹⁾을 의미한다. 우선, 대중적 교양단위라는 특징은 작업반 평가에서 생산계획 완수 정도와 더불어 당정책 이해 정도나 혁명전통학습 정도가 주요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데서 확인되고 있다. 천리마 작업반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생산실적

38) 사회과학출판사, 『로동행정사업경험』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9), 23~27쪽.

39) 전정희,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의 새로운 형태”, 『근로자』, 제9호(1964), 31쪽.

도 중요하지만 당의 정책이나 혁명전통을 학습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리마 작업반들에서 공산주의 교양, 특히 당정책과 혁명전통에 대한 학습은 생산 과정을 통해 실시되었다. 즉 혁명전통을 학습하면서 ‘그들처럼 일하고 배우며 생활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노력할 것이 요구되었다. 이렇듯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생산과정에서 지도집단인 항일무장투쟁의 역사적 경험을 대중화시키는 과정이었다. 동시에 집단주의 등 지배이데올로기의 기초가 형성되는 과정이었다.⁴⁰⁾

V. 자립적 경제발전전략의 위기와 김일성체제의 공고화

1. 대외적 긴장의 고조와 자립경제의 위기

1960년대에 들어와 급격히 악화되던 북한과 소련간의 관계는 1964년 10월 소련의 최고지도자 흐루시초프가 실각한 것을 계기로 호전될 기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1964년 11월 북한은 10월 혁명 40주년 기념행사에 내각제1부수상 김일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소련에 파견하였으며, 이에 대한 화답으로 1965년 2월 코쾨킨이 군사·경제분야의 고위 관계자들을 대동하고 북한을 방문하게 된다. 이러한 관계 개선은 1966년 6월 20일 북한과 소련 사이에 “1967~70년간 기술 및 경제원조에 관한 협정”의 체결로 이어져, 양국 사이에 단절되었던 경제협력이 재개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대소관계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련에 대한 북한의 믿음이 확

40)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 과정과 공장관리의 정치(1953~70): 수령제 정치체제의 사회경제적 기원”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8).

고한 것은 아니었다. 북한은 한국전쟁은 물론, 1962년 중국·인도 국경분쟁과 쿠바 미사일 위기 등에서 보여준 소련의 소극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으로 인해 대소 불신감을 완전히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비록 북한과 소련 사이에는 1961년 7월에 체결된 공동방위조약의 성격을 지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이 체결되어 있었지만, 북한으로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소련의 전폭적인 지원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소관계 회복은 중국과의 관계를 크게 악화시키게 되었다. 북한과 중국과의 갈등은 베트남전에 대한 사회주의 진영의 대응문제를 둘러싸고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소련공산당은 1965년 4월 베트남전의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서 소련, 중국, 북베트남 지도자들이 정상회담을 갖고 사회주의 진영의 공동대응을 모색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제의가 소련이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여 미국과 정치적 흥정을 하기 위한 함정에 불과하다고 비난하면서 거부하였다.⁴¹⁾ 이러한 중국의 자세에 대해 북한은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의 공동 행동과 통일전선은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모순되지 않으며, 반대로 그것은 더 주동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수정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⁴²⁾ 그러나 중국은 소련과 북한의 입장을 ‘기회주의’, ‘중간주의’, ‘절충주의’ 등으로 규정하고, 북한이 무원칙한 타협의 길을 택하고 있으며 “두 걸상 사이에 앉아 있다”고 비판하였다.⁴³⁾ 이러한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1966년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일어나 북한에 대한 중국의 비난이 노골화되고, 이에 대응하여 북한은 1966년 8월 12일자 『로동신문』의 “자주성을 옹호하자”라는 장문의 논설을 통해 중국의 교조주의적 태도를 비판함으로써 극단적인 상태로 치달게 되었다. 이처럼 1960년대 후반에 들어와 북한은

41) *The Sino-Soviet Dispute* (New York: Keesing's Publications Limited, 1969), p.79.

42) 『로동신문』, 1966년 8월 12일.

43) 김일성, “원 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49쪽.

대소관계를 어느 정도 회복시키기는 하였으나, 혈맹인 중국과의 관계가 크게 훼손됨으로써 안보환경은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일의 동향도 북한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한국은 1961년 군사정부가 들어선 이래 대내적 질서 확보와 함께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시작하였으며,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또한 1964년 9월 의무중대의 베트남 파병을 시작으로 1965년과 1966년에 5만 명에 달하는 전투부대와 지원부대를 파병하는 등 군사활동을 크게 강화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 사이에 긴밀한 군사, 경제적 협력관계가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65년에 맺어진 한일협정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한일관계의 정상화는 일본의 반복한 정책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3각 군사안보 협력체제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북한지도부는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처럼 1960년대 중반에 조성되고 있는 국제환경의 변화는 북한에게 다시 한번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었다. 즉 안보를 위해 경제발전을 뒤로 미루고 독자적인 방위력을 확립하느냐, 아니면 경제발전을 위해 안보적 위협을 감수하느냐 하는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당면하여 1966년 10월 제2차 당대표자회가 개최되었다. 보고에 나선 김일성의 입장은 매우 신중하였다. 김일성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어떻게 결합시키느냐 하는 것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 기본문제의 하나”라고 전제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다 파괴될 것이라 하여 국방건설에만 치우치고 경제건설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며, 평화적 기분에 사로잡혀 경제건설에만 치우치고 국방력을 충분히 강화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라며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을 보였다. 사실, 김일성으로서는 경제와 국방 어느 쪽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소

련과의 심각한 갈등을 빚으면서도 야심차게 추진해 온 자립경제의 완수는 김일성 자신의 정당성에도 관계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김일성은 경제적 성과를 내세워 반대파에 대한 숙청을 합리화하여 왔으며, 인민들의 헌신과 충성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국방력 강화 문제도 절실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고조되고 있는 안보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방력 강화가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권의 분열과 갈등 속에서 독자적인 방어능력이 없이는 더 이상 자주성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다. 결국 김일성의 결론은 “인민경제의 발전 속도를 좀 조절하더라도 조국보위의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웅당 국방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다.⁴⁴⁾

제2차 당대표자회에서 국방력 강화 방침이 채택됨으로써 북한 경제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와 북한 경제는 단 한 해도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국방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경제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특히 제2차 당대표자회에서 채택된 국방력 강화 방침은 이전의 군사전략과는 달리 자본집약적인 군의 ‘현대화’에 중심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러한 군사전략은 필연적으로 군사비를 증액시킬 수밖에 없었으며, 실제로 1967년부터 북한의 군사비는 전체 예산의 3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급증하게 된다. 이러한 군사비 증액은 결국 경제에 투자할 재원을 축소시켜, 1966년까지 전체 예산의 70%를 오르내리던 ‘인민경제비’는 1967년부터 50% 이하로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인민경제비’의 삭감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 김일성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방력을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경제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경제·국방 병진노선’을 제시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투자가 아니라, 삭감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생산을 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44) 위의 글, 354~357쪽.

었으며, 결국 인민들의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2. 자립경제를 둘러싼 논쟁과 김일성체제의 공고화

제2차 당대표자회에서 결정된 국방력 강화 방침은 당내 온건파의 몰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당대표자회 마지막날인 10월 12일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4차 전원회의에서는 당조직 구조에 대한 개편이 이루어졌다. 전원회의는 당 및 국가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일상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안에 상무위원회를 설치하고, 당중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직제를 폐지하는 대신 총비서, 비서 직제로 개편하였으며, 당의 노선과 정책들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과 일상적인 당 사업을 조직하는 비서국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조직개편에 따라 지도부 인선도 이어졌다. 인사개편의 결과는 경제관료의 후퇴와 군부의 중용이었다. 새로 선출된 상무위원은 전원이, 비서국은 박용국과 김도만을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이 모두 김일성과 함께 항일무장을 했던 경력을 가진 자들이었다. 후보위원에도 석산, 허봉학, 최광, 오진우 등과 같은 군부 출신들이 진출하였다. 반면에 지도부에서 탈락한 인물들은 대부분 경제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던 자들이었다. 이처럼 경제관련 인물들이 대거 당지도부에서 배제된 것은 일차적으로 경제적 침체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와 함께 김일성과 경제관료들 사이에 정책적 이견이 노출되었기 때문이라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 1968년 4월 중앙위원회 제4기 제17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이 행한 보고는 이와 같은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김일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을 주장하는 연설을 통해 “당의 새 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온갖 낡고 침체한 것과의 격렬한 투쟁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밝히면서, “소극분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은 낡은 공칭능력과 기준에 매달리고 파

학과 기술을 신비화하면서 대중의 창발성을 억제하고 근로자들이 더 하겠다는 것도 못하게 하였으며 난관 앞에서 굴복하고 집단적 혁신을 두려워하면서 근로대중의 장엄한 전진운동을 가로막으려 하였다”고 주장하였다.⁴⁵⁾ 또한 경제관료들은 경제운영에 있어서 물질적 자극을 확대하고, 고도성장 노선보다는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한 인민생활의 향상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짐작된다.

김일성은 자신의 정책에 이견을 제시하는 경제관료들을 제거함으로써, 국방력 강화 방침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온건파의 제거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1967년 5월에 비밀리에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를 전후로 하여 다시 한번 숙청이 단행되었다. 주요 숙청 대상자는 당 서열 4, 5위의 박금철, 이효순과 당비서 김도만, 당중앙위 과학교육부장 허석선 등이었다. 이들 역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잘못을 하였으며, 전원회의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다만 북한의 역사서에서 이들이 “당원들에게 부과된 당정책 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방해하였으며 당 안에 부르조아 사상, 수정주의 사상, 봉건유교 사상, 교조주의, 사대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와 같은 온갖 반혁명적 사상을 퍼뜨려 당과 인민을 사상적으로 무장해제 시키려고 책동했다”⁴⁶⁾고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이 당정책의 수정을 요구했거나 적어도 김일성의 지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부르조아 및 수정주의 분자들은 천리마운동의 발전을 방해하였으며 수정주의적 경계 ‘리론’을 퍼뜨리면서 높은 속도로 전진하는 우리의 사회주의 경제발전을 가로 막아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하였다”는 대목은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다.⁴⁷⁾

45) 『로동신문』, 1968년 4월 22일.

46) 『조선로동당략사』, 599쪽.

47) 위의 책, 599쪽.

제2차 당대표자회를 통하여 ‘경제·국방 병진노선’이 채택된 이후 북한 사회에는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와 김일성의 사상을 절대화하는 ‘유일사상체계’ 확립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1967년 5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유일사상체계를 세운다는 것은 자기 수령의 혁명사상, 자기 당정책으로 전당을 무장시키고 모든 당원들을 수령과 당 중앙의 주위에 굳게 묶어 세워 혁명사업을 해 나가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⁴⁸⁾고 규정하고,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운동을 전 당·전 사회적으로 벌여 나갈 것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김일성의 지시 이후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 작업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북한의 모든 매체는 연일 김일성의 위대성을 입증하는 기사로 도배되었으며, 김일성 관련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혁명기념관, 그리고 혁명기념비 등이 전국 도처에 건립되었다. ‘김일성 동지 혁명사상연구실’이 만들어져 모든 인민들이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영도의 혁명성, 고매한 덕성,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풍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 배우게 되었다. 또한 김일성의 사상적 위대성을 보여주기 위해 김일성의 저작이 속속 출간되었다. 모든 간부들은 수요강연회, 토요학습, ‘한달 강습소’에서 의무적으로 김일성의 노작과 당정책 등을 학습 받아야 했으며, 모든 인민들도 매일 2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학습하는 제도가 확립되었다.⁴⁹⁾ 이러한 학습에 직업동맹과 사로청 등 각종 대중조직도 동원되어 ‘동맹원들 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기 위한 투쟁’이 벌어진 것은 물론이다.

나아가 주체사상의 국제화를 위한 ‘소조’들이 세계 곳곳에 조직되었으며, 김일성의 사상을 찬양하기 위한 토론회가 잇달아 열리기도 하였다.⁵⁰⁾ 1968년 8월 북한정권 수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열린 사회과학 부문 토론회에서

48) 『조선전사』 제31권, 29쪽.

49) 위의 책, 33~37쪽.

50) 『조선로동당략사』, 743쪽.

주체사상은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 지도사상’으로 규정되었으며,⁵¹⁾ 1969년의 사회과학자 토론회에서는 “조선혁명에 창조적으로 적용된 맑스-레닌주의이며 현 시대의 국제 공산주의 운동과 세계혁명의 실천이 원칙적 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해답을 주고있는 위대한 사상이며 맑스-레닌주의를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발전시킨 창조적인 사상”으로 주장되기에 이르렀다.⁵²⁾

이처럼 유일사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운동이 전 사회적으로 벌어지는 가운데 1968년 말 북한에서는 또 한 차례 대규모 숙청이 진행되었다. 이번에는 김일성의 수족처럼 활동해 온 군부 인물들이었다. 민족보위상 김창봉과 대남총책 허봉학, 인민군 총참모장 최광, 그리고 김철만, 유창권, 김양춘, 김정태 등 상당수의 군 고위관계자들이 숙청되었다. 이러한 군부 인물들이 제거된 구체적인 경위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이들이 김일성의 권력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었다는 점에서 그 정치적 결과는 명백했다. 이제 김일성에게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은 완전히 제거되었으며, 전 사회적으로 김일성의 개인숭배와 그 절대적 권위는 침범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등장하였던 것이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자립적 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한 이후 몇 가지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즉 경제발전전략을 둘러싼 소련과의 갈등과 대내적인 동원의 필요성에 대응하여 북한은 주체사상이라는 독자적인 정치 이데올로기를 체계화하였으며, 인적, 물적자원의 동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당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통제체제를 확립하였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노동력 관리를 위해 집단경쟁운동과 ‘사상교양’을 일상화하였으며, 그 결과 북한의 모든 인민은 철저히 조직화되고 체제에 순응적인 신민(臣民)으로 구조되어 나가고 있었다.

51) 『로동신문』 1968년 8월 30일.

52) 『로동신문』, 1969년 4월 29일.

제5차 당대회는 이러한 북한적 정치체제를 공식화하는 자리였다. 대회에서는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 하기 위한 당의 방침이 성과적으로 관철된 결과 오늘 우리 인민의 사상 정신적 풍모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며, 우리 사회의 내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튼튼히 꾸러졌으며,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텔리의 단결이 더욱 공고화되고 온 사회가 정치사상적으로 굳게 단합되어 서로 돕고 이끌며 나가는 붉은 대가정으로 전변”되었다고 선언되었다.⁵³⁾ 또한 조선노동당도 “혁명과 건설을 위한 간구한 투쟁을 통하여 어떠한 모진 풍파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전투적인 당으로 전당이 당중앙위원회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결되고 인민대중과 혈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불패의 혁명적 당으로 장성 강화”되었다고 선언되었다.⁵⁴⁾ 당의 양적 성장도 이루어져 1970년에 이르러 조선노동당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 비하여 높은 조직력을 확보하게 되었다.⁵⁵⁾

대회에서는 또한 김일성의 ‘유일지도’가 공식화되었다. 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은 김일성의 당 건설에 관한 사상과 이론, 당 건설의 역사적 경험, 유일사상체계 확립 등이 명문화되었다. 군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하여 당중앙조직으로 군사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제2차 당대표자회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들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과 일상적인 당 사업을 조직”하기 위해서 신설되었던 비서국이 “간부 문제, 당내 문제 및 그 밖의 당면 문제를 정기적으로 토의 결정하며 그 결정의 집행을 조직 지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그 위상이 대폭 강화되었다. 이러한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이 선출된 당지도부는 김일성의 충실한 지지자들로 채워졌다. 중앙위원회 위원은 제4차 당대회 때보다 32명이 늘어난 117명이 선출되었으며, 이중 35~40명은 항일 유격대 출신으로 이들은 거의 전원이 서열 50위 이내의 요직을 차지

53) 『조선로동당대회 자료집』, 31쪽.

54) 위의 책, 18쪽, 76쪽.

55) Richard C. Gripp, *The Political System of Communism* (New York: Dodd, Mead & Company, 1973), p.46.

했다. 또한 중앙위원회 고위 서열의 절반이 현역 군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다.⁵⁶⁾

김일성에 대한 신격화 작업도 앞다투어 진행되었다. 대회 참가자들은 김일성을 ‘혁명의 위대한 수령’, ‘천재적인 사상 이론가’, ‘천재적 마르크스-레닌주의자’, ‘아버지 수령’ 등의 호칭을 사용하며, 김일성의 위대성과 ‘교시’의 위대성을 찬양하였다. 함남도당 조직 대표 양형섭은 “탁월한 수령은 당계급 및 대중을 하나로 묶어 세우는 통일단결의 유일한 중심이며 당과 대중의 의사와 지향을 가장 정확히 대표하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유일적령도를 실현하는 혁명의 최고 뇌수”라고 규정하였다.⁵⁷⁾ 이러한 양형섭의 주장은 ‘사회유기체론’에 입각한 ‘혁명적 수령론’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제5차 당대회는 “대회 결정서”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를 받들고 관철하는 것으로 서술함으로써, 수령은 ‘당의 최고 지도자’가 아니라 당보다 상위에 있는 개념임을 분명히 하였다.⁵⁸⁾

이처럼 제5차 당대회를 통해 김일성은 당지도부를 자신에게 충실한 지지자들로 구성함으로써 당내 권력을 확고히 하였음은 물론, 단순한 최고지도자의 상위에 서서 절대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수령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게 된다. 이제 김일성 권력은 신성불가침한 것으로서 당과 인민대중에게는 무조건적인 충성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대회에서는 또한 주체사상에 대한 찬양과 새로운 시대의 마르크스-레닌주의로 그 위상이 격상되었다. 김일성은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우리의 모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가장 올바른 지도적 지침”으로 되었으며, “이것이 또한 총결기간 우리 당활동에서의 가장 주되는 총화의 하나”라고 선언하였다.⁵⁹⁾ 자강도당 조직 대표 박성철은 “혁명의

56)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3』, 824쪽.

57) 『조선노동당대회자료집』 제3집, 342쪽.

58) 위의 책, 235~293쪽.

59) 위의 책, 73쪽.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발전의 합법적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지도사상일 뿐만 아니라 현 시대의 혁명과 건설이 제기하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는 위대한 지도 사상"이라고 규정하고, "천재적 수령이신 김일성 동지에 의한 주체사상의 창시는 실로 맑스-레닌주의와 혁명운동 발전의 전 역사에서 하나의 혁명적 전환을 이룩한 역사적 사변"이었다고 주장했다.⁶⁰⁾ 또한 함남도당 조직대표 김국태는 김일성이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관한 위대하고 독창적인 이론을 창시하십시오으로써 맑스-레닌주의를 사회와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까지 개조하는 학설로서 체계 정연하게 완성"하였으며,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과 맑스-레닌주의의 당이 사회주의 제도를 세운 다음 혁명을 전진시켜 계급 없는 공산주의 사회로 나가는 길이 비로소 처음으로 완벽하게 밝혀지게 되었다"고 주장했다.⁶¹⁾ 이처럼 1970년 제5차 당대회를 통하여 북한의 정치체제는 그 독특한 성격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VI. 맺음말

이 연구는 북한의 자립적 경제발전전략이 북한적 정치체제의 형성에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였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북한의 자립적 경제발전전략은 '국내의 인적, 물적인 자원을 동원하여 국내에서 생산 소비적 연계가 완결되어 독자적으로 재생산을 실현하여 나가는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전략은 소련과의 심각한 갈등 상황을 빚어냈

60) 위의 책, 302쪽.

61) 위의 책, 362쪽.

을 뿐만 아니라,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북한의 실정에서 ‘다방면적’이고 ‘종합적’인 경제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은 매우 벅찬 과제가 아닐 수 없었다. 결국 북한은 자립적 경제발전전략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상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이 북한 정치체제의 특징들이 형성되어 갔던 것이다. 첫째, 북한은 외부의 비판과 압력에 대응하여 자립적 경제발전전략을 합리화함과 동시에, 자립적 경제발전전략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민들의 자발성과 헌신성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독자적인 정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내고 체계화하였으며, 이는 주체사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둘째, 국내의 인적, 물적인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하여 당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적인 통제와 동원체제를 확립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의 조선노동당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 비해 훨씬 높은 조직력과 역할을 갖게 되었다. 셋째, 북한은 인민들의 헌신과 희생을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인민들을 철저히 조직화·집단화하고,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라는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노력경쟁체제를 확립하였으며, 그 결과 북한의 모든 인민들은 철저히 조직화되고 순응적인 신민으로 주조되어갔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하여, 1960년대 후반 자립경제의 위기와 대외적 긴장 상황에 대응하여 김일성은 지도부의 대대적인 개편과 김일성의 ‘유일사상체계’ 확립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또한 경제와 국방의 병진노선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 사회적으로 ‘혁명적 대고조’가 강요되었으며, 그 결과 제 5차 당대회가 열린 1970년에 이르러 북한적 정치체제가 태동하게 되었다.

여기서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를 경제발전전략이라고 하는 단일 변수만으로 설명하는 본 연구의 한계도 동시에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에는 기존 연구에서 지적되어온 유교적인 정치문화, 김일성의 권력의지, 그리고 냉전체제와 남북분단 등과 같은 요인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근대 시민사회의 경험을 갖지 못한 북한사회에서 유교적 전통은 사회주의 이론과 결합되어 김일성의 전체적인 지배

와 전체주의적인 질서를 가능케 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의 권력의지 역시 북한 정치에서 '민주집중제'를 부정하고, 김일성의 절대적인 지배권을 확립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김일성은 한국전쟁 시기부터 반대파에 대한 철저한 배제와 숙청을 통하여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여 왔다. 이러한 권력투쟁은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노선투쟁의 성격을 띠고 있었지만, 반대파에 대한 철저한 배제와 '유일사상체계'의 확립은 김일성의 권력의지를 빼놓고서는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또한 냉전체제와 남북분단으로 인한 위기의식의 고조는 북한사회에서 동원과 통제를 강화하고, 반대파의 도전을 억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는 점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전쟁의 경험은 북한사회에서 반대파의 존재를 부정하고, 최고지도자를 정점으로 하여 일사불란한 체제로 만드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점에서 경제발전전략이라는 한 가지 변수로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를 설명하는 본 연구의 주장은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미는 북한 정치체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간과되거나 과소평가되어 왔던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고뢰정, 『북한경제입문』 (서울: 청년사, 1988).

국토통일원,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제1집 (서울: 국토통일원, 1988)

- _____, 『조선노동당대회자료집』 제2집 (서울: 국토통일원, 1988).
- 김기남, “우리 당 경제 정책의 과학적 기초”, 『근로자』, 제4호(1957).
-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 과정과 공장관리의 정치(1953~70): 수령제 정치체제의 사회경제적 기원”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8).
- 김원석, 박원일, 『인민경제 계획화에서 군중로선의 관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1~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7~78).
- _____, 『사회주의 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
- _____, 『전후 인민경제발전 복구발전을 위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6).
-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정일저작선』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1).
- 『로동신문』
- 브루스 커밍스, “북한의 조합주의”, 김동춘 엮음, 『한국현대사연구 I』 (서울: 이성과 현실사, 1988).
- 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_____, 『로동행정사업경험』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9).
- _____,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사회구조와 사회의식의 이중성 연구』 (서울: 나남출판, 1995).
- 서진영 편, 『현대중국과 북한 40년: 자료와 통계』 (서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89).
- 스칼라피노 · 이정식,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3』 (서울: 돌베개, 1987).
- 신진균, “주체사상은 공산주의적 자주, 자립의 사상이다”, 『근로자』, 제19

호(1965).

이종석, 『조선로동당 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1995).

이종욱, “사회주의진영 나라들과의 경제적 및 과학 기술적 연계 강화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필수 조건”, 『근로자』, 제8호(1956).

전인영 편, 『북한의 정치』 (서울: 을유문화사, 1990).

전정희,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의 새로운 형태”, 『근로자』 제9호(1964).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략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조선로동당출판사, 『경제지식』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_____, 『우리 당의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로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_____, 『조선전사』 23~3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1982).

조정남, 『사회주의 체제론』 (서울: 교양사, 1995).

주체사상연구소,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경제관리 리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5).

주학필, “농민혁명화와 집단주의 교양”, 『근로자』, 제7호(1969).

직업동맹출판사, 『천리마기수독본』 (평양: 직업동맹출판사, 1963).

최완규, 『북한은 어디로』 (마산: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6).

함태영,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와 국방건설: 북한 국방정책 및 군비부담의 재조명”,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2).

_____,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남북한의 경제력·국가역량·군사력』 (서울: 법문사, 1998).

徐東晚, “北朝鮮における社會主義の成立1945-61” (東京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5).

- 和田春樹, 『北朝鮮: 遊撃隊國家の現在』 (東京: 岩波書店, 1998).
- 鐸木昌之, 『北朝鮮: 社會主義と傳統の共鳴』 (東京: 東京大 出版社, 1992).
- Furtak, Robert K., *The Political Systems of the Socialist States* (Brighton: Harvester Press, 1986).
- Gripp, Richard O., *The Political System of Communism* (New York: Dodd, Mead & Company, 1973).
- McCormack, G., "Understanding the North Korea", *New Left Review*, no.198 (1993).
- Schurmann, Franz,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8).
- Starr, Richard F. (ed.), *Yearbook on International Communist Affairs, 1988* (Stanford, CA: Hoover Institute Press, 1988).
- The Sino-Soviet Dispute* (New York: Keesing's Publications Limited, 1969).

(Abstract)

The Political Consequence of the Self-Reliant Economic Development in North Korea

Lee Seong Bong (Korea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e that North Korea's self-reliant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operated as an important variable in the process of constructing its political system. Previous studies on the political system of North Korea have considered political elements such as ideology, Kim Il-sung's will to power, and external relations as constructing factors of its political system. These approaches resulted from the perception that North Korea is more ideology-oriented and politics-centered nation than other nations. However, the leadership of North Korea has put priority on economic growth and perceived that as a major function of its political system since the Korean War. In North Korea, this signifies that politics not only functions as a major factor but also is highly subject to economy.

The self-reliant strategy for economic growth of North Korea was "to construct an economic system where they can reproduce by themselves with

a connection between national production and consumption resulted from mobilizing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However, this strategy of North Korea only caused a serious conflict with the Soviet Union and it was also impossible to establish a multi-sided and synthetic economic system in North Korean situation where capital and technology were very poor. Therefore, North Korea could not help but find another special way to accomplish self-reliant strategy for economic growth. Self-reliant strategy was achieved in three aspects. (1) The strategy created and systematized a unique political ideology that lead to the spontaneity and devotion of the people, which was needed to accomplish this strategy. This was expressed as a form of 'Juche Ideology'. (2) North Korea established a centralized control system in order to mobilize its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more efficiently. As a result, the Korean Worker's Party came to have a much greater organizing ability and influence than any other socialist states' parties. (3) North Korea completely organized and collectivized the people to extract their devotion and sacrifice.

By the end of the 1960's, these characters of North Korea's political system reached the extreme form through the policy of establishing independent military defense capability as well as an independent economy. This brought about new debates and splits, what caused the leadership to be reorganized to a great extent and established the system of 'One Thought'. The strategy for modernization of military required high speed growth and priority on heavy-industry. As a result, the society was wholly dominated by revolutionary high tides and the people's destitution and sacrifice. Finally in 1970, when the Fifth Party Congress was held, the political system of North Korea made it possible for Kim Il-sung to have absolute power on the basis of 'Juche Ideology' that was developed in the process of pushing the

self-reliant strategy for economic growth, powerful controlling mechanisms of the party, and the people who were submissive to the system. Conclusively, it can be said that North Korea's policy for economic growth performed a function as a principal variable in the process of constructing its political system.

Key Words: North Korea, Self-reliant Strategy, Economic Development.